朴 "세월호 지나친 개입은 구조 방해 될 것으로 판단"

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요지

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 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

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 문과 정책, 인사 자료 등을 최순실씨에게 보낸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.

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 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유출됐으며 이를 통 해 최씨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정책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.

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 부 체육국장,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 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 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.

미르·K스포츠재단 설립·모금 관련해 서도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 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

국회측 "헌법·법률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배…파면 당연" 대리인 "사익 추구한 적 없고 임면권 남용 안해…각하를"

적으로 도왔다고 봤다.

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 입하고 최순실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했 다는 내용도 지적됐다.

사기업에 대한 권한남용 예로는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 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수주를 하게 한 것,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 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게 한 것, 최순실 의 부탁을 받고 KT에 이동수, 신혜성을 채용하도록 한 것 등을 들었다.

국회 측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 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 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.

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

위반했다며 따로 변론을 통해 강조했다.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

출연하게 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 쟁점별로 국회 측과 팽팽히 대립했다. '비 선 실세' 최순실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 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 소추의 근거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

> 대통령 측은 최씨 관련 회사에 특혜를 주고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, 박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몰랐고 사 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민원 확인 차원 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.

뿐이라고 주장했다.

미르·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서는 문화 융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 으로 역시 최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적 이 없으며, 관련 의혹은 정치적 · 도의적으 로 비난받을 사항에 불과하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.

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 았다는 쟁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필 요한 조치는 다 했고 전문가가 아닌 대통 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.

청와대 공문서를 유출하고 사인인 최씨 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국정농단 쟁점에 대 해서도 국회와 정 반대 주장을 했다.

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쉬운 표현을 조언 받기 위해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며, 최 씨 추천을 받아 공직 임명을 하거나 사익 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면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.

'블랙리스트'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 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인사 조처 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인 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, 개인 청탁을 받아 공직 임명을 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했다. 아울러 언론사 인사 개입 등 언론 탄압 의혹도 반박했다.

또한,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적법 절차 위반 쟁점에 대해서는 탄핵사유 일괄 표결 은 위법으로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 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.

'8인 체제' 선고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서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성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 /연합뉴스

대통령-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대통령 대리인단 • 탄핵사유 일괄 표결 가능 • 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위법 탄핵소추의 •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원의 적법절차 위반 •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표결권 침해 없음 •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선고 가능 •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8인체제 선고의 적법성 달해 재심 사유에 해당 • 직권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 도움 •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 설립 미르·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• 최순실을 도와 사익 추구한 사실 없음 • 기업에 출연강요 • 정치적, 도의적 비난 받을 사항에 불과 •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남용해 • 최순실 관련 사실 몰랐고,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 최순실의 사익추구 도움 사익을 추구한 사실 없음 사기업 인사 개입 •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에 불과 •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우려는 취지 •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•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 다 해 세월호 참사 수행의무 위반 구조의무 위반 • 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•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할 개입하면 구조 방해할 것으로 판단 의무자체를인식못함 • 대통령의 묵인 하에 언론사 사정 해임 • 언론사 인사개입이나 언론 자유 언론탄압 압력 등 자행, 언론활동 위축시킴 침해한적없어 • 청와대 비서진의 세계일보 압력 지시한적없어 •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등 부당 공무원 임면권 •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유 밝힐 수 없어 인사에 개입 • 개인적 청탁 받아 공직 임면한 남용 •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사실 없어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지시 •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무원 임면과 공문서 유출 및 • 쉬운 표현 조언 위해 최순실에게 정책결정에 관여 방임 사인에게 의견물은 것 •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국민 신임 국정을 맡긴 행위 • 최순실로부터 추천받아 공직 임명한 배신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 • 특정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공무원 면직한 적 없어 **ଡ଼ି 연압뉴스**

나주 온 국민의당 대권주자들 당심 공략

기초단체장 의원 합동연수 안철수·손학규·천정배 참석 국정운영 방향 온도차

국민의당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, 천정배 전 대표는 27일 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지역을 찾 아 당심 공략에 온 힘을 쏟았다.

세 후보는 이날 오후 나주에서 열린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 나란 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.

안 전 대표는 연설을 통해 "지금 대한민 국 국민은 국민의당이 만든 여소야대, 국 민의당이 만든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은 살고 있다"며 자신이 이끈 총선 승리를 부 각했다.

이어 손 전 대표는 "탄핵 인용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생각할 텐데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이것을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고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능력, 경험을 갖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"이라고 자신을 내세웠다.

천 전 대표는 "가장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. 그리고 개혁 연정을 추진 해야 한다.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 가 집중해야 한다"며 "이 세 가지에 당력



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·손학규·천정배 등 대선주자 3명이 27일 오후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'국민의당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원 연수'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.

을 모을 때 우리가 집권도 할 수 있고 대한 민국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"고

세 후보는 4당 체제에서의 국정운영 방 향을 놓고 각기 다른 견해를 드러내기도

안 전 대표는 "선거제도가 개편돼 다당 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180석 제한 은 필요가 없고 150석을 넘는 쪽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일종의 개혁연대가 훨씬 제도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"며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.

그러나 손 전 대표는 "권력구조의 문제 라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되질 않고 개헌 을 통해 연립정부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 다"고 말했다. 천 전 대표는 "개혁 연정을 지금부터 해 나가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"며 "바른정당 의 협력은 반드시 얻어와야 한다"고 연정

에 방점을 찍었다.

한편, 세 후보 측 대리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룰 협상을 이어 갔지만, 별 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했다. 손 전 대 표 측은 선거인단 명부 없이 100% 현장 투 표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안 전 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는 물론 여론조 사 반영도 주장했다. 천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이재명 "국가권력 총동원 5·18 발포 명령자 밝혀야"

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 명 성남시장은 27일 "국가권력을 총동 원해서 5·18 학살주범, 직접 총격을 명 령한 자를 밝혀내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 시장은 이날 5·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"5·18 진 실을 기록으로써 역사에 남기고, 책임을 묻고,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"며 이같이 언급했다.

그는 "1982년 대학을 가고 나서야 5· 18은 폭동이 아니라 소수 군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집단학살극임을 알 게 됐다"며 "광주는 나를 사회적으로 다 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"라고 강조했다. 이 시장은 "헬기 기총소사를 포함해 남

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내 법



률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"며 "정 부 5·18 보고서를 채 택하고 영원히 역사 기록을 남게 할 것" 앞서 이날 이 시장

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 련, 국회가 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.

이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"국회는 즉 각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 다"며 "지금은 청산할 것인가, 굴복할 것인가의 역사적 갈림길"이라고 밝혔 /이종행기자 golee@·연합뉴스

